

【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안건 핵심내용 】

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

□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(국토부)

- ① 국민 안전·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외 드론을 활용한 모든 사업 허용
* 사업범위(현재) : 농업지원, 항공촬영, 관측 및 탐사, 조종교육으로 한정
- ② 소형 드론(25kg 이하)을 활용한 사업등록시 자본금 요건 폐지
* 자본금 요건(현재) : 법인 3천만원, 개인 4.5천만원
- ③ 자율차 시험운행 구간을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
* 시험운행 구간(현재) : 고속도로 1개, 국도 5개 노선 등 8개 노선(총376km)
- ④ 해외 안전기준이 있는 경우 초소형전기차(전기차) 운행 先허용, 後보완

□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(미래부)

- ① 개인정보보호 기준 명확화(법률해설서 마련) 및 사전동의 완화(법개정)
- ② IoT용 전파출력기준 상향 등을 통해 세계최초의 IoT 전용망 전국망 구축
* 기존 10mW → 변경 200mW (20배 상향)
- ③ 물리적 서버·망 분리 규정 제·개정을 통해 민간분야 클라우드 확산
* (금융)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(의료)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고시 제정 등
- ④ 공유민박업체 영업가능일수 확대(年 4→6개월) 등 O2O 분야 규제혁신

□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(식약처)

- ①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시 기증자 병력 확인이 곤란한 경우 안전성 검사로 대체
* 미국·일본은 기증자 병력을 확인토록 의무화
- ②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허가 후 평가실시
- ③ 뇌경색 등 생명위협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까지 조건부 허가 확대
* (현재) 항암제, 희귀의약품 등의 경우만 2상 임상자료로 허가(조건부 허가)
- ④ 위해도가 낮은 체외진단용 제품 허가시 임상시험 없이 성능평가로 대체

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 혁신

□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(국조실)

- ① 입지·투자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 303건 일제정비, 한시유예 실시
- ② 총 4조원 경제효과, 1만 3천여명 고용창출로 체감경기 제고 신속지원
- ③ 시행령 이하 과제 집중 발굴(287건, 95%), 2개월내 정비 완료

☞ 경제적 파급력 큰 개선사례

- ▶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전 광업권 취득한 경우 보호구역 해제 → 5,700억원
- ▶ 공장 및 연구시설외 지원시설과 관광·문화시설까지 공유재산 장기대부 허용 → 4,000억원
- ▶ 비수도권에 시행중인 산단 조성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수도권까지 확대(2년) → 3,500억원
- ▶ 여행업 등록시 최소 자본금 기준(일반여행업 기준 2억원) 50% 완화(2년) → 870억원

☞ 기타 주요 개선사례

- ▶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기존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시 건폐율 40% 증축 허용
- ▶ 단순 광고대행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시 사무실 의무확보 면제(2년)
- ▶ 서비스형 외투지역내 입주요건인 상시고용인원 기준 절반으로 완화(30→15인)
- ▶ 화장품 제조판매업자·제조판매관리자 겸직허용 범위 확대(1인 기업→10인 이하 기업)

□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(농식품부)

- ① 건강기능성 식품원료 확대(88→50종 추가) 및 신속심사제 도입(120→60일)
- ②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*으로 별도관리, 기업부담 완화
* 자기품질 검사주기(월1회→유형별 검사), HACCP 간소화 기준개발, 비치서류 등 유사서류 상호인정 등
- ③ 케이블카(민간단독 허용), 풍력발전(기업경영림 허용) 등 산지이용 규제개선

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(행자부)

- ① 지역건의 3천여건 중 개선필요과제 288건 선정, 관계부처 협업 신속 개선
- ② 지방공사공단의 숨어있는 불합리한 내부규정 571건 발굴, 8월까지 일괄 개선
- ③ 공유재산 규제개혁 패러다임 전환(유자보존 중심 → 국민기업 활용 지원)